

보도자료

04301 서울 용산구 청파로 320-28 1층 왼쪽집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verty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verty.kr

발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수신 각 언론사

담당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010-7797-8913>

날짜 2025. 07. 23.(수)

제목 **[보도자료]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오는 2025년 7월 23일(수) 16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제76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 등 70여 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2%를 최대로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낮게 책정되어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소득의 중위값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는 매해 커져 왔습니다. 보고서¹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격차는 2018년 20.6만원에서 2024년 53.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격차가 커진 이유는

¹ 기초법공동행동. 2025.06.23. 기준중위소득 도입 10년, 전국민의 복지기준은 왜 여전히 최저선 이하를 전전하나?. <http://antipoverty.kr/xe/publish/128044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무줄 산식에 의한 낮은 인상을 결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76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2025년 가계부 조사²에 따르면 전국 20개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가계부를 작성하는 2달 동안 육류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가 8가구, 생선 등 수산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10가구, 과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5가구로 나타났고,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외식비 포함)는 10,836원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생계급여는 일상에서 균형 잡힌 식생활, 사회적 관계 등을 포기하고 우울과 고립감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을 감추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상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이 138.3만원 이하일 경우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의하면 이는 빈곤층이 아니게 됩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며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해악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상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는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늘어난 격차를 해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빠른 시일 내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할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² 기초법공동행동. 20250703. 2025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토론회 자료집. <http://antipoverty.kr/xe/publish/1280693>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7월 23일(수) 15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개요(식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7월 23일(수) 15시 30분 /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발언1: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하는 수급 당사자 발언 - 박용수(모이면 힘이된다! 기초생활 수급당사자 모임 <모함> 회원)

발언2: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폐쇄적 비민주적 운영 규탄 발언 - 김예찬(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발언3: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4: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 철회 촉구 발언 - 주장욱(홍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발언5: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촉구 발언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기자회견문

*별첨) 요구안 [\[클릭\]](#)

*별첨) 발언문

□ [보도자료 원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를
결정하라!

오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정부위원회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논의를 진행하며, 빈곤층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없다. 이에 우리는 중생보위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빈곤층의 몫을 요구한다.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기준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향후 6년에 걸쳐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소득 중간값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는 1인가구 기준, 2020년 28.4만원에서 2024년 53.8만원으로 커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실제 필요 인상률의 20%~80%만 반영한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 온 결과다. 이로 인해 80만 명 이상이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정되며,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과소 지급액은 17.2만원에 달한다.(2024년기준) 낮은 기준중위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지제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수급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는 외식비 포함 10,836원에 불과하다. 낮은 수급비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협해 수급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고립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빈곤 정책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생계급여 현실화는

기준중위소득 격차 해소를 전제로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격차를 해소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상향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사각지대는 66만 가구에 달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측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변동되기 전까지 계속 비슷했는데,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의료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음에도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 이후 수급자 수가 증가해 약 25만명이 많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을 공약했다. 빈곤은 존각을 다투는 문제이며 부양의무자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하는 내년도 운영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정권의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이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 지난 시민사회와 복지부의 집담회에서 복지부는 입법 예고 이후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수급 당사자들은 언제 다시 시도될지 모를 정률제 등 개악안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발표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소득하위 10% 가구의 적자 규모가 124.3%로 크게 증가했다. 빈곤층의 죽음이 반복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층이 적시에 필요한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며 빈곤과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 왔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공표한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될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를 결정하라!

2025년 7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 발언문**

발언1. 박용수(모이면 힘이된다! 기초생활 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회원)

안녕하세요. 수급 당사자 박용수입니다. 제가 처음 수급자가 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벌써 8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생계급여가 50만이었습니니다. 지금 2025년 현재 76만원이고요.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감하는 것은 지금이 첫 수급받을 때 보다 생활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급비는 올랐지만 생활환경이나 물가 등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급비 50만원으로 생활할때도 참 힘들었습니다. 2~3주만 지나면 벌써 수급비가 다 떨어져서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식사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보니깐 그나마 적응이 어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요령이라고 해봐야 다른것은 아니고 안쓰는 거였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안쓰는. 꼭 필요한데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지 벌써 8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도 최대한 안쓰고 살고 있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2021년도에 제가 집을 옮겼습니다. 그전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살았는데 다섯평도 안되게 면적이 적었습니다. 운이 좋게 재개발임대가 돼서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처음이사할때만 해도 관리비라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3~4만원 정도로만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비는 12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주거비와 생계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생계비에서 관리비를 빼야 제 순수한 생계비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생계비가 76만원이지만, 저는 65만원으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돈으로 살고자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물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돈들어가는데가 많아서 점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해 마다 오르는 생계비가 과연 현실성있는 생계비인지 궁금합니다. 물가 상승률 만큼도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몇가지만 사도 몇만원은 그냥 사라집니다. 병원에서선 식단조절하고 잘 챙겨먹으라고 하지만 힘이 듭니다. 900ml 우유 한통에 3천원이 넘어가고 과일 한팩에 5천원, 1만원하니 사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와중에 우리를 힘들게하는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수급자의 병원이용이 많다고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가 추가 발생하여 안그래도 부족한 생계비가 더 부족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수급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수급비도 따라서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가 처음 수급을 받았던 2018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보다 20만원정도 낮았는데 2024년에는 53만원 적게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계급여 현실화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중생보위에서 다루어져 내년부터 수급비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중생보위는 예산이 아니라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현실화하십시오.

발언2.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 '밀실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올 해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70개가 넘는 사회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쓰이는 기준중위소득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보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몇 줄로 요약해놓은 수준의 자료만 공개되었고, 위원들이 어떻게 논의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속기록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공개할지,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린 문제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의견을 나누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당사자 배제입니다. 현재 중생보위 위원 16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현장 활동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수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월 76만원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전달하려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쫓아내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개할 건 공개하자"며 국무회의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국무회의와 같은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도 공개를 논의하는 마당에, 복지의 기준을 결정하는 중생보위가 왜 밀실에 숨어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누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지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셋째, 수급자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편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은 더 이상 밀실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장 문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3.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밀실 회의와 불투명한 행정은 기준중위소득이 수년간 위법하게 책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공표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중위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겠다는 도입된 기준중위소득은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국가 공식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 2017년 이후부터 통계자료에 따른 중위소득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된 공식 통계자료에 따른 중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비해 40만원(4인가구 기준) 가량 높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에서야 2021년 기준중위소득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출범부터가 늦었음에도 급여 및 선정기준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차액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6년의 이행기를 두어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통계자료(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에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더한 값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정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나, 그렇게 의결한 첫해부터 기본증가율을 임의로 조정했습니다. 이어진 연도에도 기본증가율을 임의로 조정해왔습니다. 기본증가율을 제대로 적용한 것은 2023년 한 해 뿐입니다. 그 결과 기준중위소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고, 공식적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중위소득 산정근거로 삼았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준중위소득과 통계상 중위소득간의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를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마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격차 해소 실패는 다시 빈곤완화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간 격차로 인한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81.9만~113.4만 가구로 추정되며, 실제로도 하위 10% 가구의 적자규모는 2025년 1분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도 6년 동안 전혀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결과는 행정적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라도 통계자료 격차를 단번에 반영하여 늦었지만 법치를 회복해주길 바랍니다.

발언4. 주장욱(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홈리스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장욱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정말 딱 1년 전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복지부는 202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025년도 의료급여의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와는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아니, 차마 상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시다시피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수급자를 ‘비용 덩어리’로만 몰아넣는 궤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아무리 본인부담상한금이니, 보상금이니 하는 장치를 만들어도, 당장 현실 물가에 짓눌려 주머니를 닫고,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당장 지출할 돈이 없습니다. 수급비가 물가를 따라잡은 적이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생계비를 현실화한 적 없으면서, 수급자에게 그동안 ‘높은 지불 능력’이 생겼다고 말하는 복지부를 보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와 관련된 발언과 토론을 준비하려고 몇 번이고 읽어서 이젠 익숙할 법도 하지만, 여전히 그 대목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2006년,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를 잘못 운영해 왔다고 스스로 ‘반성문’을 썼습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구멍 난 장독을 직접 메우라며 본인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과받은 국민에 가난한 사람은 없었고, 수급자는 사실상 ‘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왔다면, 그건 여전히 사각지대를 남겨 둔 탓일 겁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장벽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가 사과해야 했다면, 그건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4년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를 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축하는 못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반성문을 써 오십시오. 본인이 도장을 찍진 않았어도, 복지부가 그간 벌여 온 일입니다. 의료급여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후퇴시키고, 수급자를 모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는 복지부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어야 할 겁니다. 의료급여 개편을 철회하고, 수급자의 현실에서 함께 출발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발언5. 박승민(동자동사랑방 활동가)

동자동 쪽방촌에 살고 계시는 1939년생 김은숙(가명) 할머니는 지금까지 세 번의 수급신청을 하셨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때마다였습니다. 세 명의 자식이 있지만 이미 십여 년 전에 단절되어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에 의존해 쪽방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곧 구십이 되시는 할머니를 처음 지원하게 된 것은 10년 전쯤 팔을 다치셨을 때였습니다. 팔이 골절되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제가 일하고 있는 동자동 사랑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 좀 병원에 데려 달라”는 절박함에 찾아오셨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고 할머니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필요한 치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쪽방 상담소의 지원을 받아 인근의 내과 진료도 받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 곳에만 부탁하기 미안해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진료받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 할머니를 모시고 정기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수급신청을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지금도 병원 가고 싶은데 못 가지지 않냐, 병원 갈 일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수급신청을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신청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안하셨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수급신청을 하면서 자식 때문에 상처가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라며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싫은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자식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쪽방에서 연명하듯 살고 있지만, 불화로 떠나야 했던 자식들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는 것 보다, 차라리 수급신청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겨우 할머니를 설득해 주민센터에 갔지만, 저와 담당자와의 대화를 들던 할머니는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할머니의 의료보험이 큰아들 직장보험에 포함되어 있어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십여 년 넘게 아무런 지원도, 연락도 없이 살고 있다는 것과 아들 입장에서는 차마 건강보험까지는 끊을 수 없어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따지고 있는 저를 할머니는 말리셨습니다. 담당자는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과 단절소명서를 제출해 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안 해 줄 거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받아온 김은숙 할머니의 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어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당장에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그리고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 사유서. 이 서류들의 마지막 서명란에는 90세가 되는 김은숙 할머니의 뽀뽀뽀한 이름 세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제출하고 싶어 겨우겨우 힘내어 이름 세글자 서명은 했지만,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수급신청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다녀온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 꼭 들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에 방에 들리니 그동안 받아 났던 물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두고 쓰시라고 해도 줄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쪽방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에서만 지내는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를 바라고,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함께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없어지는 할머니를 보며 몇 년 전부터 쪽방촌을 찾아오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 시설에 할머니가 가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곳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수급을 받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은숙 할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머니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셔서 쪽방에서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으며 홀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할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이렇게 쓸쓸히 쪽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현실이 될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당장에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저런 기준을 들이대며 지원을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큰 걸림돌입니다.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할머니처럼 위기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철폐 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